



새로운 가족문화는 저출산 극복의 첫 걸음

이동욱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좌우하는 가장 큰 구조적 위험으로, 저출산 극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2020년 인구절벽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초저출산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의 행복한 삶 또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경제정책, 사회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정책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여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만

혼·비혼의 추세 심화와 일하는 여성의 낮은 출산율을 저출산 장기화의 핵심 요인으로 진단하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근본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 교육, 주거 등 구조적 해법 모색, 일·가정 양립의 실천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대책만으로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가치와 소중함과 같은 결혼·출산 친화적인 인식과 문화가 사회·경제적 대책과 결합될 때, 저출산 대책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답한 여학생의 비율이 76.2%에 달했다는 결과나, 2011년에 2,453건에 불과

했던 SNS의 ‘비혼’ 언급량이 2016년 1~4월에만 19,703건에 달할 정도로 급증하였다는 사실은 인식·문화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이 퇴색되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모두가 결혼, 출산,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새로운 가족문화를 고민하고 사회전반의 문화와 행태를 바꾸어 나갈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다니엘손 주한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 저출산 극복의 핵심 요인으로 사랑에 바탕을 둔 양성평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의존하지 않는 현대적 가족문화의 형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밑거름으로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시선과 참견 등으로 인한 사랑보다 물질적 조건이 우선시 되는 결혼,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의 부담이 집중되는 소위 ‘독박육아’, 좋은 대학가기 중심의 고비용 자녀 양육 문화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결혼·출산·양육을 여전히 어렵게 만드는 근본

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사랑 속에 신랑, 신부가 결혼의 주인공이 되는 거품없는 결혼, 남성과 여성이 가사와 육아의 주체로 함께 하는 가정, 아이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양육문화가 우리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될 때,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보다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합니다.

종교계는 생명과 가족의 가치가 존중받는 인식과 문화를 확산시키고, 경제계는 일·가정양립 제도가 실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장시간 근로 개선 등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민사회는 새로운 가족문화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현장도 입시위주의 경쟁의 장이 아닌 소질과 적성에 따라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변화들이 보다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 사회적 노력을 활성화하고, 구체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를 출범시켰으며, 6월 부터 전국 17개 시·도를 아우르는 전국 네트워크로 확대하여, 사회 분위기를 결혼·출산 친화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정책과 인식·문화 개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인식·문화의 개선을 뒷받침하고, 인식·문화의 개선은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현실에 근거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인식개선을 양 축으로 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이 멀고, 험난할 수 있으나, 우

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나아갈 때, 모든 세대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가까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저출산 대책 실패론에서 벗어나, 우리 모두가 창의성과 역동성을 발휘하면, 반드시 인구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